

■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확정 과제는

## 천문학 비용…시 지원금 1조 최대 관건

총사업비 5조7000억원 추산 '기부대양여' 한계  
주민 수용성·민간공항 우선 이전 등 숙제 산적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대통령실 주도 6자 TF 첫 공식 회동에서 전격 타결됐다.

정부 주도 속에 이어당사자 간 합의로 군 공항 이전 논란에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지만, 재원 조달과 부지 용도, 주민 수용성, 민간공항 선 이전을 둘러싼 논란 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3개 정부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는 17일 광주에서 대통령실 주재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광주

공항 무인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광주공항이 개항한지 61년, 국방부 평가 결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

이 내려진지 9년 만이다.

문제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다.

기부 대 양여는 광주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

준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넘기

는 방식이다.

현재 이전사업 총사업비는 5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새 군공항 건설비 4조

791억원,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최소

4500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356억원, 금융비용 3825억 원 등이다.

그러나 땅값 상승,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7조 원을 넘어 10조 원까지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총 사업비 예산에 착수한 상태다.

종전부지 개발도 핵심과제다.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 광주형 실리콘밸리, 디즈니랜드, 백만평 숲 등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부동산 침체와 원가 상승,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해 백지화됐거나 일부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이 8.2㎢(248만평)

으로 상무지구 2.5㎢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여서 상업·산업·주거 등 용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중요 핵심이다.

금융비용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관심이다.

무안군은 합의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여기에 주민 반발이 커지면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또한 광주에서도 민간공항 선 이전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광주 시민들의 여론도 관심이다.

이밖에도 △총사업비 현실화 △기부대

양여 협행화 △기본계획상 공항 배치와 활주로 규모, 공역 조정 △무안 산단 조성 근거 마련 △소음 대책과 능지·어업 보상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지원 방안은 충분히 논의됐는데, 이번 합의 발표문에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며 "부족한 내용은 특별법을 개정 보완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 전남·경남도의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합심'

지방의회 차원 첫 정책 공조  
건설·지원법 공동협력 협약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와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를 공식화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견의하고, 견의문과 결의문 등 정책 자료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전남과 경남을 잇는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고, 토론회·공청회 등 공동 연구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보도자료와 홍보 과정에서도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전남·경남 양 도지사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과 12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 발의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왼쪽 세번째)와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식화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특정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이 국회와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

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이어지는 데 지방의회의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도 "전남과 경남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힘을 모으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국회 견의·안 체택 등 의회 차원의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 '영산강 인공습지' 조성 본격화

2028년까지 140억 투입…생태공간 확대·관광 명소화  
물순환체계 구축·하수처리수 활용 10만t 정화용수 확보

광주시가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용두교와 신동교 인근 약 6만 5570㎡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착수한다.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수질 정화기능과 자연친화적 생태 공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이 찾는 생태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인공습지 조성은 영산강의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고 수변 여가·관광·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영산강 수질 개선과 수변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400억원을 투입해 서구 덕흥교에서 북구 월산교까지 약 11km 구간의 수질을 기준 3~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 때 강물을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하천수와 하수처리수 일부를 활용해 하루 10만t 규모의 정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화된 물은 평상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돼 수생태계 회복과

천수기반을 마련하고, 가뭄 때는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돼 다목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이상 기후와 강수량 감소에 대응한 광주시의 전략적 물관리 대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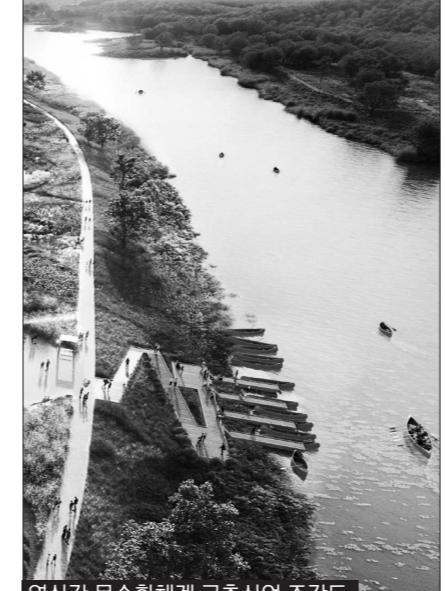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영산강 현지조사와 수질 변화 예측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다져왔다.

환경부가 물순환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지원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에 참여, 국정과제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 공모사업에 맞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선정될 경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규 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영산 강은 국가하천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주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 조감도

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역 주요사업과 국정과제의 연계를 통해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이끌어내고, 인공습지 조성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영산강을 광주의 대표적 명소로 수변공간이나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미래 새로 설계하는 일"  
김영록 도지사 "기대 뛰어넘는 합의"

### ■ 이전 합의 정치권 환영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합의문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따금 반면, 시민사회와 일부 지역 인사들 사이에서는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기정 시장은 17일 합의문 발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는 의한 '무안 통합 이전 로드맵'은 단순한 공항 이전 계획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무안에는 공항도시가 들어서고 광주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것"이라며 밝혔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도 "지난 6년간 '반대' 외에 구체적인 대안이나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못해 협상 주도권을 상실한 결과"라며

"공식적인 입장 정리와 군민 공론화 과정 없이 합의문을 설명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호남지방항공공항 신설 검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무안군은 협약으로 기대되는 협약으로 기대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당시자인 6자(광주·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SNS를 통해

"기대를